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22.(화)

한성숙 국무총리, “생명지킴 정책 간담회 개최, 성과 중심의 자살예방대책 강조”

- 흠어진 위험신호를 데이터로 연결해 원인·경로 분석하고 현장 대응 강화
- 추석 앞두고 “가족·이웃에게 먼저 안부 묻는 관심” 당부

-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2일(화)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 예방 및 데이터 분야 전문가,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「생명지킴 정책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 - 지난 7월 생명 안전 분야별 데이터 관계기관 회의에 이어, 데이터를 활용해 자살 위험을 더욱 정교하게 포착하고 실제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살 사망자가 '25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, ▲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 개선 ▲자살 사망 동향 데이터 공유 확대 ▲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원인·경로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.
 - 현재 하나의 주된 동기를 중심으로 파악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, 가족 관계·교육·직업·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하고, AI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책과 지원으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또한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,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살 동향과 특성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- 아울러 정부는 사망원인뿐 아니라 복지·보건의료·고용 등 다양한 범정부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업, 부채, 질병,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이 어떻게 누적되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.

- 이를 통해 자살 위험이 커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을 통해 개입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,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- 한성숙 국무총리는 “처음부터 어떤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설계하고,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·공유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 “자살 사망자가 왜 줄었는지,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, 효과가 확인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, 부족한 정책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이어 “자살 예방 정책도 이제 '대책을 만드는 것'에서 '성과를 만들어내는 것'으로 나아가야 한다”며, “중앙정부가 몇 개의 대책을 발표했느냐보다 지역 현장에서 실제 몇 명의 생명을 지켜냈느냐가 중요하다. 데이터가 실제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겨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자살 위험 요인 분류체계 개선, 자살 사망 동향 데이터 공유 확대,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원인·경로 분석 과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- 또한, 한 총리는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“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”라며,
 - “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,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한두희 (044-200-6367)
	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 이효진 (044-200-6379)